

청년이 모이고 머무르는 전주 만든다

시, 청년 지원사업 강화... 문화·주거·구직 등 청년 생활 전반 실질적 지원 강화 정책 추진

전주시가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의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시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내년도 청년정책·사업은 문화와 주거, 구직 등 청년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청년 활력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청년 구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활력수당 △청년지역정착 지원 △청년 면접장장 무료 대여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취업 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금융 지원을 위한 △청년 민원주택 '청춘★별채'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 함께 두배자금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사업 등도 지속된다.

여기에 청년들의 문화·복지 지원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대학생 친원의 아침밥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등도 운영될 예정이다.



전주시에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의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확대되는 주요 사업을 서 운영된다.

살펴보면, 청년 문화 예술패스는 올해 19세 청년 대상 10만 원 지원에서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만 19세·20세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20만 원으로 2배 늘린다.

이와 함께 공연·전시 중심에서 영화 관람까지 활용 영역이 넓어져 청년들의 문화 접근성이 한층 강화됐다.

뿐만 아니라 그간 구직자 중심으로 운영해온 청년 면접장장 무료 대여도 대학원 면접 등 진학 준비 청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전북대학교와 기정대학교 등 2개 대학에서 운영해온 대학생 친원의 아침밥 사업도 내년부터는 전주대학교가 참여해 총 3개 대학에

이를 통해 더 많은 대학생이 부담 없이 건강한 아침 식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기존의 한시 운영에서 상시 운영으로 전환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 하반기 12호 공급에 7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큰 관심을 받은 청년민원주택 '청춘★별채'의 경우에도 내년 초 평화동 신축 24호에 대한 입주자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 지원 정책의 운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웹툰 제작 등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더 많은 청년이 사업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점진적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기존사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정착 기반을 확충해 청년이 모이고 머무르며, 함께 살아가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전주비전대 '맞손'

RISE 기반 평생교육 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에 전주비전대학교와 손잡고 디지털·AI 기반 평생교육 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와 전주비전대는 지난 12일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평생학습관의 학습 자원을 연계해 실무 중심의 평생교육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주비전대의 컴퓨터실·실습실·기자재 등 대학 시설이 시민 교육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며, 디지털 교육과 AI·키오스크 교육 등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한 프



로그래밍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비전대학교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추진되는 RISE 사업의 주요 참여대학으로,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평생직교육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이 사업과 연계해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과 AI 기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사회적경제 브랜딩 구축 필요”

전주시정연구원, 사회적기업 경제·사회적 가치와 발전 과제 발간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전주시 사회적기업의 창출 가치와 발전 전략을 담은 '전주시 사회적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발전 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94개였던 전주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올해 기준 708개로 2.4배 성장했다. 하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의 숫자는 지난 2021년 50개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해 2025년 역대 최저 규모인 15개로 줄었다. 연구원은 이 흐름이 유지되면 향후 전주시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확장은 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연구원이 2024년 사회적기업 영공시 자료를 토대로 전주시 사회적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전주시 사회적기업은 주로 제조업과 교육,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에 집중됐고, 문화·예술과 교육 분야 서비스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전주시 사회적기업의 총매출은 1230억 원으로, 전주시 GRDP 16조의 약 1%를 차지했다. 각 사회적기업의 2021~2023년 3개년 평균 매출은 139억 원, 영업이익은 770여만 원으로 산출됐다. 전주시 87개 사회적기업이 2023년 한 해 동안 고용한 유급 근로자는 총 1183명이고, 그중 57.14%가 취약계층 근로자로 나타났다. /권희성 기자

고용된 취약계층은 고령자가 가장 많고 이어 장애인 비중이 높았으며, 저소득층 고용 비율은 제일 낮았다. 연구원이 경영공시 데이터 중 45개 사회적기업을 표본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한 결과, 전주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총액은 연간 20억 60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전주시 전체의 사회적기업 108개 기업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규모는 연간 4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연구원은 전주시 사회적경제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유 브랜드가 미비해 시민 인식이 미약한 것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등이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손꼽았다. 따라서 연구원은 신규 사회적기업 진입을 유도하고 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해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2년마다 실시되는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에서 정책 수요뿐만 아니라 경영 컨설팅 수요를 업종과 업력에 따라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한국사회적진흥원이 전국 지자체 소속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기업경영공시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큐뮤필름스튜디오 투자 계획 간담회 개최

뉴질랜드 큐뮤필름스튜디오의 전주 투자 계획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주시의회와의 정책 논의가 이어지며 투자 협의가 한 단계 진전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연구단체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는 지난 1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큐뮤필름스튜디오 한국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전주 고당동 일원에 33만㎡ 규모의 영화종합촬영소 조성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남관우 의장, 류성환 큐뮤필름스튜디오 대표, 이국 의원, 전주시 문화산업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이 참석했다. 연구회장인 이국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전주시의 해외 영상물 유치를 위한 입법 성과가 소개됐다. 전주시의회는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를 중심으로 올해 '전주시 영화영상산업 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국 최초의 독립형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을 제정했다. 또 내년에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류성환 대표는 2,300억원 규모의 스튜디오 조성 계획을 설명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사운드 스테이지와 수중 촬영 세트, 국내 최초의 해양표면 탱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비업체 입주를 위한 대여공간 조성,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청년 일자리 창출

전주 노송동 지사협, 물품 후원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동장 채월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혜숙)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30세대에 탄소배트, 극세사 이불을 전달했다.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후원금으로 마련됐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위원,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들이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신상교회, 리면 37박스 기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신상교회(담임목사 박용호)는 지난 12일 팔복동에 리면 37박스를 전달했다. 전주신상교회는 1947년에 설립된 교회로 추수감사절을 맞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모금한 '사랑의 나눔리면'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



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의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